민주당 경선 방식 내주까지 확정

"광주·전남 일부 배심원제 도입"

광주시장 시민배심원 도입 여부 최대 관심

당 주류-중도·비주류 세력 갈등 커질 듯

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6월 지방선거 경선 룰에 대한 가닥을 잡고 늦어도 다음 주에는 최종 경선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주류 일각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시민공천배심원제 적용 대상 지역을 개괄적으로 정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반대하는 당내 중도 및 비주류 세력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당 지방선거 기획본부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강기정 의원은 15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지역에 대한 1차 의견을 당 지도부에 올릴 예정"이라며 "최고위원회의 등 당내 내부 논의 등을 감안한다면 시민공천배심원제 적용 지역은 다음주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원칙적으로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공천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도입돼야 하는 지역은 10여 곳이 넘지만 모두 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 자리 수 지역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로 후보를 뽑도록 안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부 인사들을 배심원으로 투입하고 후보 토론이 있어야 하는 시민공천배심원제 특성을 고려하면 시간이 별로 없다"며 "이르면 다음달 중반에는 시민공천배심원제를 통한 기초단체장 경선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류 측 핵심 관계자도 "지방선거 기획본부와 통합과 혁신위원회 등에서 호남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공론화에 나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지역에 대한 결론은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 당내 중도 및 비주류 상당수가 정당 및 책임정치에 어긋나고, 지역의 대표를 100명의 지역 인사와 100명의 타지역 인사들이 선정한다는 점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철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등과 관련, 먼저 앞서 나가는 발언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뒤 "이번 주 내에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법에 대한 광주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당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시민공천배심원제도 당내 경선인 만큼 30일 이전에 선관위에 통보해야 한다"며 "내부 논의 시간 등을 감안하면 기초단체장 및 광역단체장 경선은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순에나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및 지역 선정을 둘러싸고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우선 광주 국회의원들이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반대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복당한 정동영 의원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광주시장은 광주시민이 뽑아야 한다"며 국민경선 도입을 주장,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반대에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전남지역 일부 기초단체장 경선에서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과 관련, 상당수의 해당 지역구 의원들도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명간 시민공천배심원제 적용 대상 지역이 공론화되면서 당내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보다 성숙한 자세로 현안을 풀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설 민심 잡기 6·2지방선거 광주시장 입지자들이 15일 오후 광주 YWCA에서 열린 '민주가족 합동 세배'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찬용, 정동채 예비후보, 이용섭 국회의원, 양형일 예비후보.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본보 여론조사에 나타난 초반 민심

3선 거부감 미미, 인물론 꿈틀 여성 약세·소지역주의는 여전

'3선 거부감은 강하지 않았지만, 소지역주의는 여전했다. 지역발전에 앞장설 인물에 대한 기대가 꿈틀대는 가운데 여성후보에 대한 관심은 아직 약했다.'

광주일보가 지난 5~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나타난 6·2지방선거 초반 민심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다음달부터 민주당이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가면서 이런 민심은 증폭되거나 약화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부동층이 30~40%대인데다 아직은 대세를 형성할 정도의 여론은 아니지만, 후보군들이 선거전의 초반 이슈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민심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는 3선 도전 현직 지지율 떨어져

◇**기초단체 3선 강세 여전**=광주·전남지역에서 3선에 도전하는 현직 단체장은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 정종득 목포시장, 신정훈 나주시장, 이성웅 광양시장, 서삼석 무안군수, 김종식 완도군수, 황주홍 강진군수 등 10명이다. 지난 연말·연초까지만 해도 이들이 마의 3선 고지를 제대로 넘을 수 있을 지가 관심이었다.

현재까지는 농어촌 지역 3선 도전자들이 경쟁자들과 큰 차이로 앞서고 있다. 황주홍 강진군수(58.6%)와 김종식 완도군수(57.1%)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과반이 넘는 지지를 확보하며 광주·전남에서 각각 지지율 1, 2위를 기록했다.

유태명 동구청장(29.8%)과 황일봉 남구청장(32.0%), 정종득 목포시장(38.3%), 신정훈 나주시장(34.7%), 이성웅 광양시장(36.7%) 등도 해당 지역에서 여론조사 선두를 달렸다. 광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적홍보와 조직관리가 쉬운 점등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사정이 달랐다. 박광태 광주시장(15.1%)는 0.1%포인트, 박준영 전남지사(25.2%)는 5.5% 포인트가 신년여론조사보다 빠졌다. 반면 상대후보들은 약진했다.

◇**인물론 꿈틀**=지방선거에서는 전통적으로 인물론과 지역기반론이 맞붙어 왔다. 아직까지 전·현직 단체장이 대부분 지지율 선두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앙과 관계에서 활동했던 일부 인사들이 이들을 위협하고 있다. 허남석 전 곡성경찰서장(곡성, 27.3%), 김양수 전 전남공무원연수원장(장성, 24.8%) 유창종 전 담양부군수(담양, 16.5%), 이동진 전 전남개발공사 사장(진도, 11.6%) 등이 대표적 사례. 또 김흥래 전 행자부차관(진도, 9.3%), 배성기 전 중부발전 사장(여수, 7.1%), 임성훈 전 경기도벤처협회장(나주, 7.1%) 등도 완연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며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여성 후보들은 부진을 면지 못하고 있다. 광주 서구의 김선옥 전 광주시의원(4·4%), 강진군의 국령애 전남도의원(3·3%) 등은 한자리 숫자의 지지를 얻는데 그치고 있다.

◇**소지역주의 여전**='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투표에서는 출신지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광주시장후보 여론조사의 경우 강운태 의원이 지역구인 광주 남구에서 43.2%로 2위 박광태 시장(10.5%)을 압도했다. 5.7% 지지율로 전체 5위에 머물렀던 전갑길 광산구청장도 광산구에서만은 15.6%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전남에서도 ▲박준영 지사는 고향인 영암(40.1%)과 인근의 목포(38.8%) 등 ▲주승용 의원은 지역구인 여수(50.5%)와 인근의 순천(30.9%) 등 ▲이석형 전 함평군수도 함평(56.4%)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론조사 추월" 불법 홍보 기승 광주·전남 선거법 위반 173건

지방선거와 관련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무차별적으로 알리고, 여론조사가 실린 지방신문을 대량 배포하는 사례가 잇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5일 광주시 선관위 등에 따르면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용섭 국회의원 측은 지난 13일 중앙 언론사가 발표한 광주시장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량 발송했다.

선관위는 아직까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 의원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은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선서 캠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 A씨가 설 인사를 겸해 평소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놓은 1천여 명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자원봉사자 A씨를 16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또 지난 12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아파트 일대에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실린 광주 모 일간지가 대량 배포된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신문이 구독 여부와 상관없이 무작위 배포된 점으로 미뤄 특정후보 측이 설 연휴 민심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뿌린 것으로 보고 배포자를 찾고 있다.

공직선거법 95조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사기 실린 내용을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배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 선관위는 전남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만의 출마 선언 소식 및 출판기념회, 기자간담회 소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한 전남 H.S 인터넷 언론사 2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위반으로 각각 '주의' 조치를 했다. 인터넷 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가 특정 입후보 예정자만의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기사화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오도할 수 있는 불공정한 보도"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심의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7건의 불공정 보도를 심의해 모두 '주의'조치했다.

한편, 광주·전남 선관위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173건(광주 17건, 전남 156건)의 불법 선거행위를 적발해 이 중 14건을 고발했다. 또 12건을 수사의뢰하고, 3건을 수사이첩했으며, 144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